

# 국제 기구의 대북 지원 활동 평가와 남북 관계

임을출 /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식량난'이 북한 문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와 비례해서 국제 기구의 대북 지원 활동도 나라 안팎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 국제 기구들은 대북 지원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의 단순한 식량이나 의료 지원부터 시작해, 점차로 북한의 구조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역에까지 지원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북한도 지난 1995년 여름 수해 이후 이들 유엔 기구와의 협력이 당초 권력 핵심층의 우려와는 달리 체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식량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내심 반기는 눈치다.

그러나 유엔 기구의 북한 문제 개입이 단순한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비춰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식량난에 대한 평가가 한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 사이의 이견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북한의 농업 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카드와 중복될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북한의 근본적인 농업 개혁에는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한국의 참여없이 유엔 기구의 농업 지원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으나, 어쨌든 주목해야 할 대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곡물 지원과 농업 개혁 지원 등은 남북 관계 개선 차원에서 한국이 직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베이징 대표 접촉에서 구호 물자의 대북 직접 전달 절차 합의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 문제 제기

### 북

한의 참혹한 식량난의 실상이 붓물처럼 터져나오면서 유엔 기구 차원의 대북 지원 활동<sup>1)</sup>이 북한 관련 주요 이슈

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유엔 기구들은 사실 북한에 의 단순한 곡물 지원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북한의 근본적인 농업 구조 개선까지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유엔 기구 차원에서도 대북 지원이 단순한 인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북한이 세계 평화의 화약고로 남아 있는 지역인 만큼, 이를 순화하는 차원에서도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보다 깊숙이 북한 문제에 개입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이들 유엔 기구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므로써 당장의 절박한 식량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북미 관계 개선과 더불어 국제 사회와의 친화적인 이미지 심기role도모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도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또한 유엔 기구의 북한 식량난에 대한 평가가 우리 정부의 평가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북한 지원 방식과 규모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아, 그 진위에 대한 궁금증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오늘날 가장 주목되는 북한 이슈로 북한의 식량난과 이에 대한 유엔 기구의 지원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기구의 적극적인 북한 식량 문제 개입이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임은 분명한 것 같다.

## 북한 식량난 평가를 둘러싼 이견

유엔 기구에 의한 북한 식량난은 대체로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동으로 '북한 식량 및 식량 공급 상황 평가 조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현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만든 특별 보고서의 형태를 통해 대외에 발표된다.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지난 6월 4일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으로서, 북한내 10개 지역의 식량 배급이 끊기는 등 식량배급체계가 붕괴 직전에 처해 있으며, 긴급한 구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6월 20일 이전에 북한 전역에서 식량 배급이 완전히 중단될 전망이라고 유엔 산하의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밝힌 것이다.

FAO와 WFP는 5월 17일부터 24일까지의 북한 방문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배급체계가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아무런 대체 방법을 찾지 못해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긴급한 구제 조치가 즉각 취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아사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2,300만 명의 북한 주민 가운데 국가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1,700만 명에 달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1)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은 유엔 산하 기구와 국제적십자사, 개별 국가, 국제비정부기구(NGO) 차원의 지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대북 지원 규모가 가장 크고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유엔 산하 기구들의 대북 지원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북한의 식량 배급 중단 일정

시도 구분	식량 배급 중단 일정
평안북도	5월 15일
황해북도	5월 20일
평안남도	5월 24일
개성	5월 25일
황해남도	
평양	6월 5일
함경남도	
자강도	6월 10일
함경북도	6월 15일
양강도	6월 20일

자료: 세계식량계획(WFP) 현지 실사 보고서(1997. 6).

이 보고서는 이어 국제 사회에서 대규모의 식량 지원이 없을 경우 올여름까지 북한 주민의 1/5에 해당하는 470만 명이 굶어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통일원은 FAO와 WFP의 북한 식량난과 배급 상황의 평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곡물 자체 생산량과 소요량을 평가해볼 때 식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1996년 11월 이후 국제 사회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고려하면 식량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북한내 식량배급체계의 비효율성과 수송난 등으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배급 중단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적 배급 중단'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FAO나 WFP에서 과장된 수치를 보고서에 담은 것은 북한 당국이 국제 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

도하기 위해 일부 과장된 통계 및 자료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통일원은 올해의 경우에도 자체 생산량만으로는 200여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6월 이후 북한 전역이 기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6월 초 시점에서 향후 북한의 식량 사정을 평가해볼 때 지난해 11월 이후 외부로부터의 곡물 도입량이 총 38만여 톤에 이르고 있으며, 6월 중에도 최소한 18만여 톤 정도가 도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입량을 감안할 경우 8월 초까지는 세계식량계획(WFP)이 우려하는 바와 같은 대규모 기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통일원은 1996년 자체 생산량만으로도 6월까지는 지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조만간 지원될 예정인 유럽연합(EU)의 15만 5,000 톤, 한국 정부의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 규모 5만 톤의 식량과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하는 5만 톤, 중국과의 정상적인 교역을 통한 월평균 6만 톤 정도의 수입량 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8월 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6월 중순이면 10만 톤 정도의 보리가 수확되고 8월 중순부터는 고구마, 감자, 햇옥수수 등을 수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서 일단 대량 기아 상태를 피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유엔 기구는 어떤 실사 과정을 거쳤길래 이런 결론을 갖게 되었는가.

식량농업기구나 세계식량계획 등은 우선 1차적으로 북한측에서 제시하는 통계 자료에 의존하는 것 같다. 이들이 만든 보고서 내용이 북한측의 주장과 거의 일치해 더욱 그렇다. 북한 외교부 산하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가 국제적십자연맹을 비롯해 북한 내에서 대북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유엔 기구 등에 건네주는 통계 자료인 '식량 형편 자료'<sup>2)</sup>를 살펴보자.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우선 연간 알곡 소요량을 783만 9,000 톤으로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먹는 양이 482만 9,000 톤, 공업 원료 120만 톤, 사료 140만 톤, 급양 17만 톤, 종자 21만 톤이다.

한편, 이 자료는 북한이 1996년에 생산한 연간 알곡 생산량은 결국으로 250만 2,000 톤을 생산해서 이 가운데 1996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102만 톤을 소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말 기준으로 148만 2,000 톤, 12월말 기준으로는 24만 6,000 톤의 국가 재고량만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를 기초로 북한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는 올해 3월 말에는 6만 톤의 곡물만 남게 되고

4월 이후에는 국제 사회의 대대적인 곡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한 배급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자료는 이어 이러한 통계 수치는 북한 주민 1명당 100~350g 기준으로 배급했을 경우라고 전제하고 있다. 더불어 이 통계 자료는 지방마다의 큰물 피해 정도, 지대 조건, 생산 수송 조건, 기타 조건에 따라 배급량이 다르다고 덧붙이고 있다. 어쨌든 큰물피해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는 앞의 식량농업기구나 세계식량계획에서 제시하는 배급 상황 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북한 식량난에 대한 통일원의 평가와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의 평가가 이처럼 상반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북한에 대한 불신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반증인지도 모른다.

### 유엔 기구의 대북 지원 현황<sup>3)</sup>

유엔 기구가 대북 지원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북한의 뉴욕 주재 유엔대표부가 1995년 여름에 70년만에 가장 큰 수해 피해 이후 처음으로 정확히는 1995년 8월 23일에 유엔인도지원국에 대북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부터이다. 유엔인도지원국은 북한의 요청

2) 조선큰물피해대책위원회(1995. 5), 「1996년 식량 형편 자료」.

3)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June 1996), *UN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Flood-related Emergency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1 July, 1996~31 March, 1997.

을 받아들여 우선 그 해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유엔재해평가 및 긴급조정팀(UNDAC)'을 북한내 수해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파견했다.

이때 이미 평양에 상주하고 있던 유엔개발기구(UNDP)의 도움을 받아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식량농업기구(FAO) 식량 전문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북한의 식량난과 배급 상황을 처음으로 실사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인도지원국은 1995년 9월 12일에 대북 지원 관련 유엔 기구 공동으로 최초로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모금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게 된 것이다.

〈표 2〉 유엔 기구의 대북 지원 분야별 지원 계획  
(1996. 7. 1~1997. 3. 31)

(단위: 미 달러)

분야	요청 금액
식량 지원	26,804,365
농지 복구	10,322,260
보건 활동	5,940,310
분배 과정 확인과 보고	566,000
총계	43,632,935

〈표 3〉 유엔 기관별 대북 지원 계획  
(단위: 미 달러)

(단위: 미 달러)

기관 구분	모금 계획
WFP	26,804,365
FAO	4,722,000
UNDP	5,843,260
WHO	2,385,000
UNICEF	3,828,310
UNDHA	50,000
총계	43,632,935

처음에는 목표 금액을 1,500만 달러로 잡았으나, 나중에 2,011만 달러로 수정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북한의 절박한 식량난이 지금처럼 국제 사회에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아 국제 사회로부터 호응이 낮았다. 이때에는 목표액 가운데 930만 달러로서 45%밖에 달성되지 않았다. 이때 미국이 222만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를 기탁했다.

이후 세계식량계획(WFP)이 1995년 11월 4일에 4 명의 긴급구호팀을 북한에 파견하면서부터 이 기구가 북한 지원 활동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세계식량계획은 우선 2만 250 톤의 쌀과 675 톤의 식용유를 북한에 긴급 공급하기 위해 885만 달러의 지원을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이때 세계식량계획은 자체 예산 가운데서 비상증여금 5만 달러, 국제긴급식량지원금 220만 달러를 지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1995년 11월 24일에 최초의 식량 인도분 5,140 톤의 쌀을 북한에 보내게 된다

유엔아동기금(UNICEF) 차원에서는 최초의 3 개월 동안 즉각적인 긴급 식량 지원을 위해 83만 5,900만 달러 모금을, 그 다음 3 개월 동안의 보조 식량과 홍역예방자금 등을 포함한 비상 지원 계획 마련을 위해 629만 1,500만 달러를 국제 사회에 호소했다. 유니세프는 북한외 일반 국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25만 달러를 북한 지원을 위해 재배정까지 했다. 이후 평양에 모니터링사무소를 개설해 주

로 홍역 예방 접종 캠페인과 설사 예방 등을 5세 이하 아동들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했다.

이들은 우선 수해 피해가 가장 심한 4개 지역 탁아소의 9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1,500 톤 가량의 Corn Soy Blend를 제공하고,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5세 미만인 6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홍역 예방 주사를 맞게 했다. 또한 수해로 인한 식수 오염으로 초래될지 모를 설사 치료를 위한 약품을 배급하는 등 유니세프는 북한의 보건부와 유니세프 국가협력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와 밀접한 협력 관계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평양에 상주하고 있는 유니세프의 국제협력관은 구호 물품 인수와 식량 배급 과정의 직접 확인, 예방 접종 캠페인에의 직접 참석, 평양 유니세프상주사무소 개설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도 뉴델리사무소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온 기부금 12만 달러를 비롯해 자체 보조금 10만 달러를 대북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2차 대북 지원 프로그램은 1996년 7월부터 1997년 3월까지 8개월 기간 동안 목표액 4,360만 달러 가운데 1차 때보다는 성과가 좋은 3,469만 달러를 모금해 80%를 달성했다. 이때에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334만 달러를 비롯해 미국은 620만 달러, 일본이 600만 달러를 기탁했다.

1997년 4월부터 1998년 3월까지를 목표로 한 3차 대북 지원 프로그램<sup>4)</sup>에는 목표액 1억 2,622만 달러 가운데 4월 말까지 4,263만 달러를 모금해 목표액의 34%를 채웠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6,305만 달러 지원 규모를 발표하는 등 국제 사회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어 목표액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차 때는 미국이 지금까지의 최대 금액인 2,500만 달러를 지원했고, 한국은 600만 달러를 기탁했다.

더구나 일본 정부도 북한 당국과의 현안인 북한내 일본인 처의 일본 방문 허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1차·2차 지원 참여에 이어 조만간 일정 금액

〈표 4〉 유엔 기구의 제3차 대북 지원 분야별 프로그램 (1997. 4. 1~1998. 3. 31)

(단위: 미 달러)

분야	요청 금액
곡물 지원	95,469,268
식량 안보(농업 구조 개선)	20,966,635
보건	9,032,274
조정 협력, 모니터링, 리포팅	758,000
총계	126,226,177

〈표 5〉 유엔 기관별 대북 지원 계획

(단위: 미 달러)

기관 구분	모금 계획
WFP	95,469,268
FAO	10,604,160
UNICEF	4,777,274
UNDP	9,800,475
WHO	5,500,000
UNDHA	75,000
총계	126,226,177

의 성의 표시를 할 것으로 보여, 유엔 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 대북 지원의 우선 분야와 전망

유엔 기구의 대북 지원 활동의 1순위는 무엇보다 식량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을 푸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되는 과제가 아닌 만큼 우선은 대규모 기아를 막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고, 북한 당국도 식량 지원이야말로 수해 복구 활동의 핵심이라면 서 이를 공식적으로 유엔 기구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즉, 대북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 유엔 기구들은 수해 복구 활동을 위해 동원된 대규모의 '노동력에 대한 식량 지원(food for work)'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북한의 공공배급제도는 전통적으로 중노동자에게 매일 일반 노동자에게 주는 700g보다 많은 900g씩을 제공해왔으나, 이는 1996년 여름 동안 중단됐고 아직도 복귀되지 않은 상태이다. 갈수록 식량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한 상황이다. 국제 식량 원조는 중노동자의 배급량을 복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이 긴급한 공공 사업을 마무리 짓고 토지 정비나 홍수로 파손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재건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인도지원국(UNDHA)에서 작성한

제3차 대북 지원 프로그램에서 특징적인 것을 북한의 보다 근본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나온 '식량 안보'란 개념이다. 즉, 대북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유엔 기구들은 북한에 식량을 구입해 전달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지만, 지속적인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1996년 11월에 농업식량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작성한 곡물평가조사단 보고서는, 수해가 북한의 농업 생산성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고, 유엔개발계획(UNDP)과 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1997년 봄부터 북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성 배가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들 기구들은 첫번째 가지적인 조치로 2,690만 톤의 보리 종자와 830만 톤의 요소(비료)를 지원했다. 이때 스위스 정부와 유럽연합, 비정부 기구들, 국제적십자연맹 등도 3,840만 톤의 보리 종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들 대북 지원 기구들은 약 300만 달러의 농업 생산성 지원 물자를 올 3월 초부터 특정 지역의 북한 농부들을 대상으로 이들 종자와 비료를 지원했다.

이처럼 유엔 기구는 단순한 대북 식량 지원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북한의 근본적인 농업 구조 개선 분야에까지 활동 영역을 확

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April 1997). *United Nations Consolidated Inter-agency Appeal for the DPRK*, April 1997~March 1998.

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유엔 기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보다 장기적으로 북한 농업 지원 활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 유엔 기구의 대북 지원 활동과 남북 관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1991년 9월 한국과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심각한 식량난을 계기로 유엔과의 최대 밀월 관계를 누리고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에 홍수 피해로 인한 긴급 지원 요청을 하기 이전까지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두만강개발계획(TRADP)를 둘러싼 관계국간의 조정자 역할에 나서면서 북한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어온 적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7~8 개나 되는 유엔 산하 기구가 북한 돕기에 전면적으로 나선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 농업 지원에의 개입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유엔 기구의 활동이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민족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대북 식량과 농업 지원 문제는 남북한 당사국간의 직접적인 교류 협력에 의해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유엔 기구의 대북 지원 활동의 폭이 넓어질수록 한국의 농업 지원 카드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앞에서 보았듯이 유엔개발계획(UNDP) 등은 북한의 구조적인 농업 개선까지 염두에 두면서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남한 배제 정책을 계속 고수하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유엔 기구들이 효과적으로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성공의 관건이나 실질적으로 유엔 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규모에 있어 갈수록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유엔 기구의 대북 지원 활동도 남북 관계와의 보조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낙관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한국 정부의 또 다른 딜레마를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실상 어느 정도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는 유엔 기구와 한국 정부 사이에 대북 식량난의 실상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견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식량난의 실상을 과소 평가함으로써 대북 지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을 비켜가려고 한다는 비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유엔의 '순수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 활동이 북한 당국을 순치시키는 변수로 작용해, 궁극적으로는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평화와 중립을 핵심 모토로 삼고 있는 유엔이 대북한 식량 지원 활동을 빌미로 남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유도하는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號**